

내수 활성화가 답이다

경제인의 창



김용강
KTT대표

지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3대 핵심소재 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데 이는 조치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일본에 소재 부품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로 중반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과 경제 연구기관 투자은행 등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이 반영되면 2%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수입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되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다각도로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묵살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일본의 반도체 제조 3대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일본 정부는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전략 물자 1천194개 중 74개 비전략 물자와 화이트리스트와 무관하게 건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사용 민간물자' 263개를 제외한 857개 품목에 대해 건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본 정부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줄여줄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승인까지는 최대 90일이 소요되고 승인이 반드시 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일본산 소재 부품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특성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반도체에 한정됐던 소재부품의 수급 차질 및 생산 축소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1천194개의 전략 물자 중 설비·탄소섬유 등 일본 의존도가 특별히 높은 159개를 집중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일부 품목에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출 허가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있고 아직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확산할지는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9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만으로도 한국의 GDP가 최대 8.58%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수출을 규제하며 일본의 GDP를 1.2%P 감소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1.2%P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2.0%로 0.5% 하향 조정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한일 무역 갈등의 투자와 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2.4%를 한국의 올해 성장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한국은 둘러싼 대외 환경은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자를 끌어내고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규제완화를 말하지만, 과연 이런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를 풀었는지 되돌아 보고 싶다.

기업들이 느끼지 못한 규제가 제대로 된 경제 규제 완화 일까? 정부의 규제완화 목소리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 지적이 나온다는 점에 관계 부처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외 환경 탓만 하고 있는 정부 임기는 2년 정도 남았다.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 정책의 실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수 활성화가 답이다!

사설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는 주민의 알권리 침해

국내의 다양한 뉴스의 접근은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이들 포털이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지역언론을 배제해 개선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대책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 입법과 함께 네이버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지표를 적극 활용해 이같은 책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기

관투자자의 ESG코드가 '공정경쟁 및 사회 발전 노력 수준'이란 평가 지표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송경태 교수(경희대)는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제평위) '제휴 요건'에 '지역 언론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하지는 의견을 내놨다. 뉴스제휴 기준과 같은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반대로 책임성을 강화하여 퇴출과 제재가 쉬운 방식으로 제평위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분권에 바탕한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를 낳는다. 무엇보다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 속에 성장한 포털이 지역언론을 배제한다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없다. 언론노조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 등 기관 투자자를 활용하기 이전에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해 지역언론의 포털뉴스 서비스 확대를 강제해야 한다.

총체적 부실행정이 부른 서구 클럽 붕괴사고

안전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시의 명성에 먹칠을 한 서구 클럽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구의 회가 지난 1일 발표한 특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혜성 조례 제정에서부터 사후관리 감독까지 전행적인 부실행정이 이같은 참사의 원인이 됐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가 행정사무조사의 결론이다.

우선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조례 제정은 전국 유일의 특례 부칙으로 업소에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적절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조례였다. 특히 구체적인 객석면적이 기입되지 않은 채 전체 영업면적(504.09㎡)만을 기입하는 편법이 동원됐는가 하면 총허용 업소 지정에도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 함심한 불감증이 판쳤다. 안전위원의 명단에 업주가 버젓이 포함돼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소방안전관리자도 업주가 맡았다. 한마디로 고양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었다. 사후 관리 감독도 양성하기는 마천가지였다. 총허용 업소 지정 후 객석 면적을 명기하도록 돼 있었지만

업소 운영 이후 지난 3년간 단한차례도 확인 기록없이 업소의 자체 진단만으로 गर몃했다 고 한다.

서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조례 제정에서 중간점검, 안전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까지 예상했던 부실과 무책임으로 얼룩졌음을 의미한다. 어느 것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 부실의 종합판이었다. 이쯤 되면 배정 영업과 부실 행정, 의회의 견제능력 부재가 부른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가 이 정도로 그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사고는 우리 생활주변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험에 노출된 불법 건물들이 이번 사고 클럽만의 문제인지도 의심스럽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한탄이지만 서구 의회가 먼저 이런 문제를 짚았더라면 하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물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업주와 유착의혹도 하루 속히 가려내야 한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경찰 수사에 쏠려 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행복한 학교 서머힐'을 읽고, 내가 상처 준 아이들에게

교단칼럼



양승현
월곡중 교사

지난 여름 '행복한 학교 서머힐'이라는 책을 읽었다. 서머힐 학교의 철학과 방침에 공감하기도 하고, 때론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재미있게 읽었다. 내용이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술술 읽어다가 어느 지점에서 읽는 속도가 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 한동안 책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다.

'좋은 교사와 부모의 훈련은 군대형이 아닌 오케스트라형이어야 하는데, 비참한 가정과 학교는 증오심과 처벌에 의해 다스려지는 군대 막사와 같다.'는 말과 '좋은 어른은 자기 자신을 아이와 동일시하고 그의 여러 가지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며, 그의 여러 가지 한계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마음속의 동기나 원한을 마음에 품어 두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속의 구절을 읽다 문득 떠오르는 경험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 것이다.

8~9년 전 특별한 병이 아닌데 여기저기 아픈 것 같아 대체의학을 하는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누군가가 나한테 품고 있는

원한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는 '저, 그렇게 원한 살만한 일은 안 했는데요.'라고 말하고 병원을 나왔다. 그러나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준만한 일을 한두 개 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한 일이었는데, 많은 친구들 앞에서 면박주거나 때리고 벌을 줬던 일들 수십 가지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특히나 그 중 몇 개의 일들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들이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해 놓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것이다. 머릿속 깊은 곳에 묻어놓았던 그 부끄러운 기억이 '마음 속 동기가 원한을 품어두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구절을 읽으며, 내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나는 많이 괴로웠다.

신규교사 시절의 나는 아이들이 날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꽤나 엄하고 무섭게 학생들을 잡으려고 했었다. '독서록 제출 안 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스무 대를 맞는다.'라고 엄포를 하면 제출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놓았는데, 딱 한 명 독서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있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켜야 교사로서 권위가 선다고 생각했고, 많은 아이들 앞에서 손바닥 20대를 정말 온 힘을 다해 때렸다. 그 후 그 여학생은 날 보지 않으려고 수업을 빠지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한다. 또 어느 날은 '담배 피우다 걸리면 허벅지 몇 십대'라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는

담배 피우다 걸린 학생을 허벅지에 피가 터지도록 때린 적도 있었다.

나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묻는다. '사랑의 매였는가?', 아니 그 행동에는 '사랑'은 없었다. 그때 당시 나 스스로 '숙제를 잘 하는 책임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내 사랑하는 제자가 휴연자가 되어서는 안 돼.'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리화했었으나,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님이 내뱉은 잘못된 말의 '권위'를 지켜보겠다는 정말 치졸한 행위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도 다시 한 번 고백하고, 만날 수는 없지만 내게 상처 받은 많은 학생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빌어야겠다. 그때는 '맛을 짓'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상에 맞을만한 일'이라는 건 절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다.

이제 처벌이 완전히 금지돼서 내가 이런 반성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학생들을 때릴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처벌만이 폭력이 아닌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늘 내게 물으려 한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특히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자율성에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를.

학생들이 선한 본성에 의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부드럽고 따뜻한 교사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런 학교와 가정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껏 내가 상처 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동수 (보성경찰서 마린파출소)

보복운전은 사소한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벌 기준도 다르다.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특수상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단 1

회의 행위라도 폭행, 손괴, 협박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점에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

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도로는 모두가 함께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대로 운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진다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수 (보성경찰서 마린파출소)

프락치

정국이 운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매달려 있다. 야당은 연일 그의 딸 대학 입학과정과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원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부풀리기에도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여야합의로 잡혔던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정책 검증보다는 의혹 제기와 공방만 판을 친다.

이런 가운데 낯익은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끈다. 국정원이 프락치를 고용해 시민단체를 감시해 온 정황에 대한 보도가 그것이다. 한 언론이 프락치로 활동해 온 사람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공언해오던 터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정국의 또 다른 파장이 불가피하다.

프락치는 원래 러시아 말로 도당, 당파, 파벌 등을 뜻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질돼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로 첩자가 안성맞춤이며 정보원의

로도 불린다. 냉전시대와 달리 요즘은 프락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프락치라는 단어는 고 3때 처음 들었다. 자율학습이 한창이던 여름, 관리 감독을 하던 담임이 갑자기 필자를 지명하며 진로실로 오라고 했다. 진로실로 들어가니 담임은 다짜고짜 필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태권도 유단자였던 담임은 인정사정없이 필자를 공격했고 필자는 맞지 않으려 방어에 애를 썼던 기억이 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담임은 필자에게 교장 선생님 프락치냐고 물었다. 프락치라는 단어를 몰랐던 필자는 아니라고 했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바탕 난리 뒤 프락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국정원의 프락치가 과거 아픈 기억을 재소환한 셈이다.

나라가 조국 대전(大戰)으로 난리다. 서로 합의해 놓은 청문회 일정도 지키지 않고 '내 탓 공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럴 때 정치권에 '국민의 프락치'를 보내 진자 속내가 어떤지 알고 싶다. 속이 시커먼 정당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필자 뿐이라!

양생 문화체육부장 gingulove@srb.co.kr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근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체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치부 (062)606-7730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22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제보 062-606-7722·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